

투데이 칼럼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고창군, 파크골프장 난립 막아야

인 구소멸지역, 위기를 기회로 정부주도의 산업화 정책 속에 도시는 과밀화되고, 농촌은 인구절벽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지방인구감소가 시작된 지 오래다.

감소하다 못해 이제는 소멸위기 지역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글프게도 내 고장 고창도 예외는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 울음소리는 그친지 오래고, 들판에는 어르신들만이 군데군데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모두의 지원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읍·면별 사업 지향, 권역별 발전 모색해야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다. 빠듯한 우리 재정을 민생경제 회복, 농촌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간 필자는, 각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시설은 기존처럼 14개 읍·면에 두되, 그 외 부수적인 시설 등은 고창군을 동·서·남·북부면과 중심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개발계획을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변함없이 주장해왔다. 그간 무분별하고 신발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 간 연계와 과감한 통합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이하기 때문이다.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 권역별 건립 추진해야

현재 고창군에는 각 읍·면별로 체육관이 하나씩 들어서 있다. 그러나, 상당한 예산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각 체육관의 연평균 이용 일수는 1년 365일 중 40일도 채 되지 않는다.

면 단위의 복지관은 체육관을 볼 때마다, 20여 년 전 본인이 제안

했던 대로 서너 개의 인접 면을 하나로 묶어, 하나씩만 체육관을 지었다면 지금과 같은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 원거리 이동이 자유로운 요즘 체육관이 굳이 집 가까이 위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체육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요즘, 노인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파크골프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많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확고하다. 체육관 건립 사례를 교훈삼아, 민원에 이끌려 각 읍·면에 하나씩 파크골프장을 짓는 일이 없도록 파크골프장반대는

권역별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공음면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 고창군의회에서 재논의하고자 했던 이유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고창군의 인구·연령·성별 등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된 중장기적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곳에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자 힘하였다.

공공체육시설, 나눠 쓰는 미덕으로 지역 상생 도모

각지의 지역이 자기만의 개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고창도 이에 발맞춰 변화해 나가야 한다. 권역별 사업추진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투자한다면 고창군은 소멸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아도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권역별 시설물을 기꺼이 나눠 쓰는 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오미크론 변이는 우려의 원인이지, 패닉의 원인은 아니다”며 변이 충격에서 벗어나 부스터 샷 접종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메시, 레반도프스키 제치고 2021 발롱도르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가 지난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빼아뜨르 뒤 샤틀레에서 열린 제86회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2021 발롱도르’ 트로피를 들고 있다. 메시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 조르지뉴(첼시)를 제치고 통산 7번째 발롱도르의 영예를 안았다.

사설

순국선열 후손들 예우 문제

독립 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여전히 허술해 개선책이 절실히라는 지적이 많다.

전북의 겨우 대부분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마다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고 있지만 후손들은 여전히 소외를 받고 있다. 전북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보훈수당 조차 지역별로 차별을 받고 있다. 후손들에게는 가난이 대물림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지난 1997년 5월 9일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최소한의 예우조차 외면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조례 제정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를 기리는 기념사업 등에도 무관심하다.

전북의 지자체 중 순국선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북도와 고창군 등 단 두 곳뿐이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영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등을 각각 마련했다.

두 조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항일 독립 유적 발굴 및 보존 사업, 독립 유공자 추모 사업, 지역 내 기념행사, 교육사업, 자료 수집·정리 학술 및 문화 사업 등 기념사업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순국선열 후손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규정 조차 없다. 수당을 두고 지역 간 형평성도 문제다. 지역마다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까지 차이가 난다.

전주시의 경우 순국선열 후손들에게 제일 적은 3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임실·장수군 등은 10만 원의 보훈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후손들은 조금이라도 보훈수당을 더 주는 임실·장수군 등에 주소를 옮기거나 이를 가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代)가 망한다. 는 말이 사라지기 바란다.

온난화와 과일 지도 변화

지구온난화로 과일 재배 지도가 변하고 있다.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산으로만 여겨졌던 바나나, 망고 등 아열대 과일 재배가 경기, 강원 등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열대·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은 2014년 1345㏊에서 2016년 1406.5㏊로 증가했다. 망고, 키위, 용과, 아보카도, 파파야, 구아바, 바나나 등 재배하는 과일도 다양하다.

2001년 제주에서만 재배했던 망고는 지금 현재 전남, 전북, 경북 등 전국에서 재배하고 있다.

패션프루트는 경북 김천, 충북 진천에서도 생산된다. 멜론은 강원도 양구에서도 나온다.

열대·아열대 채소 재배 면적도 급증했다. 바다 속 상황도 마찬가지다.

여름철에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치솟아 아열대 바다처럼 변하고 있다.

1911년부터 2010년까지 100년 동안 국내 대도시 평균 기온은

1.8도 상승했다. 세계 평균 0.75도보다 그 폭이 훨씬 크다. 해역별로는 동해가 1.48도, 서해가 1.18도, 남해가 1.04도 각각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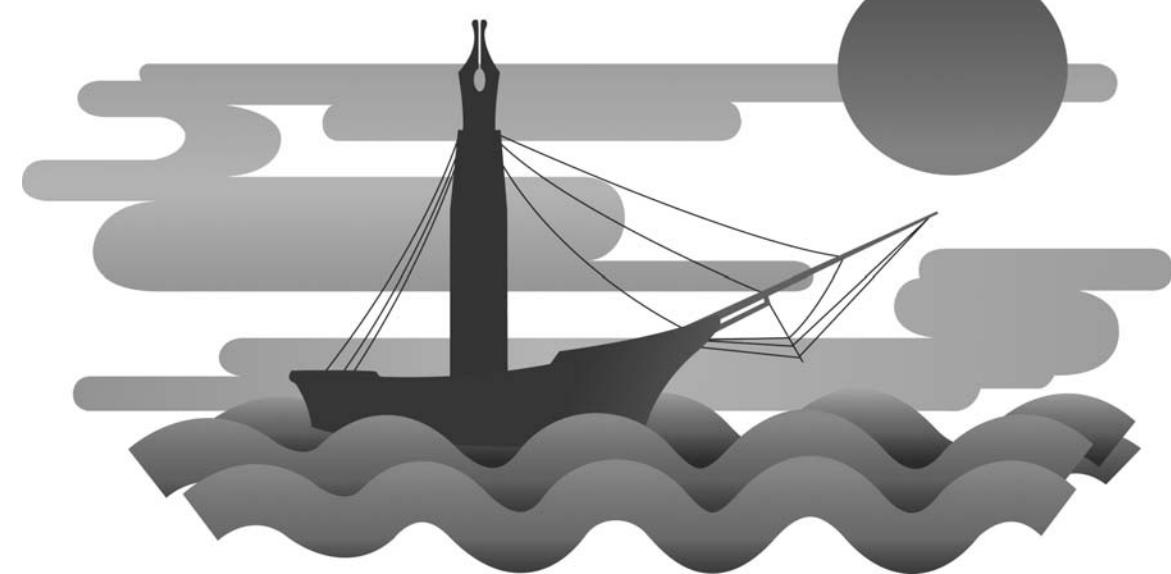
최근 4년 동안 제주 연안에 출현한 아열대성 물고기는 전체 어종의 40%를 넘었다. 대표적인 아열대성 어류는 청어, 가시, 복, 거북복, 호박복, 이하동가리, 쥐돌, 철갑등이 등이다.

부산과 경남 등 남해 연안은 물론 동해의 독도 주변 바다에서도 아열대 산호초와 물고기들이 자리를 잡았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자산어보’집과 200주년을 기념해 서해의 흑산도 주변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 기록되지 않은 물고기들이 무려 26종이나 됐다. 이 가운데 당멸치, 일지말리, 립술치, 셋새, 톡가시치, 바리엔댕이, 열동기리돔, 노랑촉수, 꼬치고기, 별납치, 투라치, 동강연치 등 16종은 열대·아열대에 서식하는 물고기였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